더민주 도당위원장 선출 '경선' 갈 듯

오찬모임 성과없이 끝나
김춘진 · 김윤덕 대결 예상
인지도에선 김춘진 우세
이춘석 · 전주권 지역위장 변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들이 전북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추대와 경선'이라는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지역위원장들은 오찬모임을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안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오찬 모임은 이춘석, 안호영, 김춘진, 김윤덕, 김성주, 김윤태, 박희승 등 7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역 정가는 이날 모임을 통해 추대로 가느냐, 아니면 경선으로 하느냐 의견일치를 볼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 상충으로 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 "좋은 분위기에서 가능하면 합의 방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이 중론이다.

특히 분위기만을 놓고 보면 합의 보다는 신경전이 팽팽했다는 전언이다.

일단, 도당 위원장직 도전의사를 밝힌 지역위원장은 김제부안의 김춘진 전 의원과, 전주갑의 김윤덕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병 김성주 전 의원 출마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는 "경선 보다는 합의에 의한 추대시 도당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춘진 전 의원과 김윤덕 전 의원의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은 경선으로 갈 경우 김춘진 전 의원쪽이 우세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역내 표심을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이며 다선인 김춘진 전 의원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춘진 의원은 지역위장 경선에서 조직선거 고수인 최규성 전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는 등 당내 영향력을 몸소 보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이춘석 의원이 김윤덕 전 의원을 밀어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주권 지역위원장들이 김윤덕 전 의원을 지지한다면 판도가 바뀔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이춘석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를 전제로 "다선의원보다는 초선의원에게 기회를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밝혀 김춘진 전 의원 출마 포기를 암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합의추대가 결코 쉽지 않은 노정이다. 또 자칫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박주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 가족이 한 차례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당시 횡성군은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됐던 시기였다는 주장이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박 의원실에 "해당 부동산은 이 내정자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 연설회가 전북에서 개최된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8월3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제4차 새누리당 전당대회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제주) 합동 연설회가 열린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난 1990년 민자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북 정치의 자긍심과 위상이 한층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김영란법 국회의원 적용여부 논란 점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지적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부정청탁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 아니냐. 그런 것도 김영란법에 포함되게 손봐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경진 의원도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사무실도 똑같이 적용대상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 국민이 어떤 민원 요구도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 김영란법에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편하기도 할 것 같다"며 개정에 찬성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부분은 아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따가운 건 사실이다. 내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국회의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황현 도의장, 수서발 SRT 호남 · 전라선 증편 촉구

"호남선 수요전망 맞게 증편
수서발 전라선 포함해야"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호남지역 KTX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와 연계한 호남 · 전라선 증편을 촉구했다.

황 의장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 운행편수는 총 52회로 이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철도망의 3대 축인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전라선은 전주와 전남 동부권역을 관통하고 있고,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2015년 한해에만 965만명, 순천만국가정원 520만명, 여수세계엑스포 1,300만명 등 이 지역 철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라선 KTX 이용객은 전년도 4~12월 대비 하루 평균 6177명에서 9091명으로 47% 증가해 운행 중인 열차의 상당편수가 매진돼 증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역 이용객도 1769명에서 2685명으로 52% 늘었다.

이처럼 호남 KTX 개통 이후 전라선 이용객이 급증했는데도 호남선 운행시격은 28분, 전라선은 96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주권은 물론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 북동부와 경기도 동부지역에는 전라선 철도를 이용할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도민들과의 왕래는 물론 수서발 SRT 개통 취지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호남지역 KTX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와 연계한 호남 · 전라선 증편을 촉구했다. 사진은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라선 증편은 외면한 채 서대구 KTX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특정지역 편중논란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황현 도의회 의장은 "호남 KTX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가 호남선 고속철 운행 횟수를 수요전망에 맞게 증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기반시설인 철도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고속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수서발 SRT 운영계획에 전라선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건 등을 채택,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신광영 기자